

의안
번호

1316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돌봄 안전망 재설계 촉구 대정부 건의안
(박선애 의원 대표발의)



창 원 시 의 회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돌봄 안전망 재설계 촉구 대정부 건의안
(박선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16
----------	------

발의연월일: 2026. 4. 21.

발 의 의 원: 박선애 · 김경희 · 김묘정 · 김상현 · 김수혜
김현일 · 문순규 · 성보빈 · 이정희 · 이해련
전홍표 · 진형익 의원(12명)

1. 제안 이유

- 최근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음
- 행정기관에서 이미 해당 가정에 대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극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가 돌봄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임
- 이에 창원시의회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함

2. 주요 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사회보장급여법」, 「아동복지법」과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가의 사회보장 책임을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현실에서는 위기를 인지했음에도 적극적인 보호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함

3. 건 의 문: 붙임

4. 수 신 처: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국회의장, 국무총리실(의전비서관),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돌봄 안전망 재설계 촉구 대정부 건의문

최근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행정기관이 해당 가정에 대해 이미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비극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돌봄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생활고, 돌봄 공백, 고립 위험 등 복합적 위기 신호가 존재했으나, 이를 실질적 지원으로 연결하는데 부족했다는 점에서 현행 복지 전달체계와 돌봄 안전망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사회보장급여법」, 「아동복지법」과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가의 사회보장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신청주의 중심 구조, 기관 간 정보 단절, 일회성 지원 등으로 인해 위기를 알고도 보호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창원시의회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돌봄 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가적 책임을 촉구하며, 정부가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적 방안과 현행 제도들의 보완·개선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한다.

하나. 위기가 확인된 가구에 대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는 원스톱 사례 관리 제도를 강화하라.

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상황에 신속히 개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관련 재정을 지원하라.

2026년 4월 일

창원시의회